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91호
2019. 1. 7

정책동향

▣ 디지털 전환의 이해와 건설기업의 선결 과제

시장동향

▣ 2018년 12월 CBSI 80.9 기록, 전월보다 3.5p 올라

▣ 2018년 해외건설 수주 분석과 2019년 전망

▣ 남북 교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산업정보

▣ 미국 건설기업의 인재 양성 이슈와 시사점

건설논단

▣ 건설 경기 경착륙,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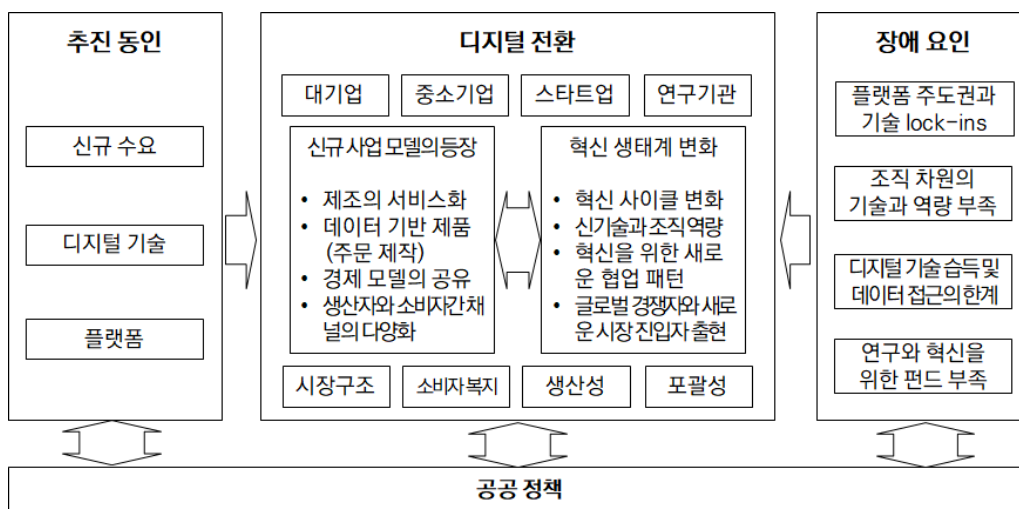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의 이해와 건설기업의 선결 과제

-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조직, 프로세스 등 인프라 확보 및 개선 필요 -

■ 디지털 기술 발전은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유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은 디지털(Digital) 방식에 기반한 사회 구조 변화를 유도함. 1)
 - (디지털 기술)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로봇 등의 기술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초연결화(Hyper-Connection), 초융합화(Hyper-Integration)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산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구조를 지식 정보화 방향으로 유도함.
 - (디지털 전환)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프로세스, 고객관리 방식,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기존의 경영 방식과 가치사슬을 재정립해야 함.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들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플랫폼 기술과 로봇, 3D 프린팅, IoT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정착에 노력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및 프레임워크



자료 : The innovation policy platform(2017), "The impa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innovation across sectors".

1) 한국표준협회(2018),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대응 방향과 추진 전략".

-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 및 비즈니스 모델의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필수적임.
- 또한, 디지털화 및 디지털 전환의 장애 요인으로 간주되는 플랫폼 주도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 데이터 접근의 한계성, 관련 투자 기금의 부족 등이 사전에 준비 및 해결되어야 함.

■ 경영진의 비전 및 전략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도입

- 디지털 전환은 기업 경영 전략으로 기술의 선별적 적용 등의 Bottom-up 방식보다는 경영진으로부터의 Top-down 방식을 통해 전사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특히, 경영진이 수립한 디지털 전환 비전과 전략,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아래 사항들을 확보 및 구축해야 함.²⁾
 -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체계의 구성,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조직 측면에서는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임명하고, 인력은 외부 인력의 채용과 육성 제도가 요구됨.
 - 디지털 전환 비전 및 전략을 운영·관리·조정·평가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과 프로세스, 정책, 평가(KPI) 체계가 요구됨.
 - 구축한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략 및 신규 디지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R&D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 및 디지털 혁신을 수행함.

■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 플랫폼 통합,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

- 건설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IT 기술 및 시스템 등 신규 기술 도입과 적용 측면에서 타 산업에 비해 뒤쳐져 있었음. 디지털 전환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적용은 재무 성과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음.
 - 건설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 내 존재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통합, 플랫폼 통합 과정에서 표준화, 디지털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문화 및 기술 장벽의 해소, 디지털 전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 측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³⁾(<표 1> 참조).

<표 1> 건설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

선결 과제	세부 내용
생태계 통합	• 건설산업 및 기업 내 존재하는 다중 생태계 및 플랫폼의 통합
합리화 및 표준화	• 복잡하고 비표준화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표준화 및 합리화
디지털 인력 양성	• 건설산업 및 기업 내 디지털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디지털화 확보	• 문화 및 기술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더딘 기술 도입 및 가치 실현에 대한 사전 대응
가치 측정	• 디지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측정 및 공유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2)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7), “2017년 IT산업 메가트렌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여정”.

3) Global Industry Council(2018), “Five Keys to Unlock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Engineering&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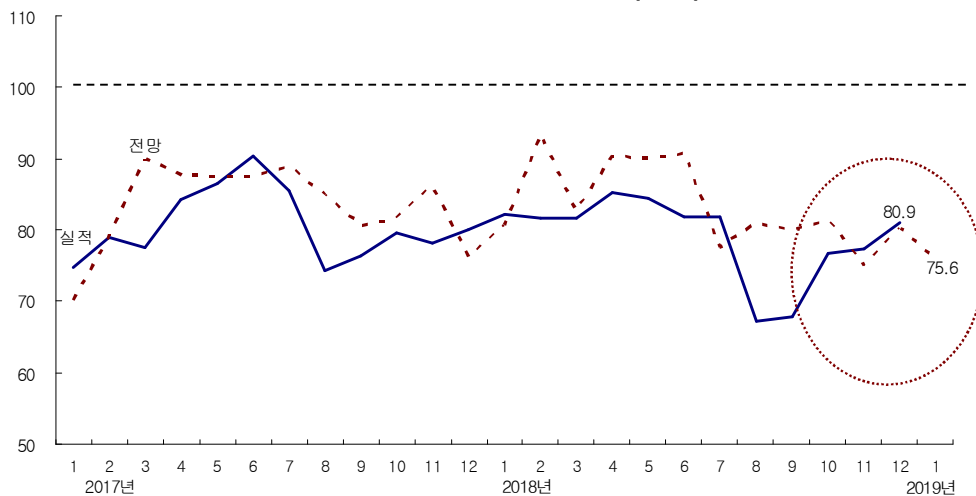
2018년 12월 CBSI 80.9 기록, 전월보다 3.5p 올라

- 계절 효과 및 SOC 예산 증액 영향, 예년보다 상승 폭은 저조해 -

■ 2018년 12월 CBSI 3.5p 상승, 5개월 만에 80선 회복

- 2018년 12월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에 비하여 3.5p 상승한 80.9를 기록함 (<그림 1> 참조).
 - CBSI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8·27대책, 9·13대책) 영향으로 8월과 9월에는 60선으로 부진했는데, 10월과 11월에 각각 8.9p, 0.6p 상승하고 12월에도 3.5p 올라 5개월 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절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2019년 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증액된 19조 8,000억원으로 확정되는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요인 또한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다만,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은 저조함. 최근 5년간 11~12월 사이 지수가 평균 7.7p 상승하였는데, 2018년의 연말 지수 상승 폭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3.5p로 낮은 편임.
 - 공종별 신규 공사 수주 지수에서 토목은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나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 하락해 부진하였음. 연말 토목 발주 증가로 전체 CBSI 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축부문이 부진하여 지수의 상승 폭 자체는 예년 수준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의 악화된 상황이 전월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 회복 수준은 미미하고 지수도 80선으로 전반적인 건설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임.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중건을 제외한 대형과 중소기업의 지수 상승

- 기업 규모별로는 중건을 제외한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가 상승함(<표 1> 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8.4p 상승한 91.7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2.8p 하락한 70.5를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6.7p 상승한 80.3을 기록해 지난 6월에 84.5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 기업 지수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됨.
 - 서울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4.4p 상승한 89.7을 기록함.
 - 지방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9p 상승한 70.5를 기록해 지난해 8월에 55.5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함.

<표 1> 기업 규모별, 지역별 CBSI 추이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1.5	81.6	85.2	84.5	81.9	81.9	67.3	67.9	76.8	77.4	80.9	80.2	75.6	
구 모 별	대형	91.7	92.3	100.0	100.0	83.3	100.0	81.8	75.0	83.3	83.3	91.7	83.3	83.3
	중견	89.7	89.7	82.1	82.1	78.0	82.5	67.5	67.5	81.4	83.3	70.5	85.7	80.0
	중소	60.3	59.6	71.4	69.0	84.5	60.0	50.0	60.0	63.9	63.6	80.3	70.4	61.7
지 역 별	서울	93.6	93.5	94.7	92.4	81.0	92.2	77.9	73.8	86.5	85.3	89.7	84.3	80.0
	지방	67.0	66.7	73.9	75.3	82.8	82.9	55.5	61.1	65.9	67.6	70.5	75.2	70.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년 1월 전망치, 2018년 12월 실적치 대비 5.3p 하락한 75.6 기록

- 2019년 1월 전망치는 2018년 12월 실적치 대비 5.3p 하락한 75.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2019년 1월에는 전월인 2018년 12월에 비해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1월에는 전년 말에 비해 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음. 2019년 1월에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2018년 해외건설 수주 분석과 2019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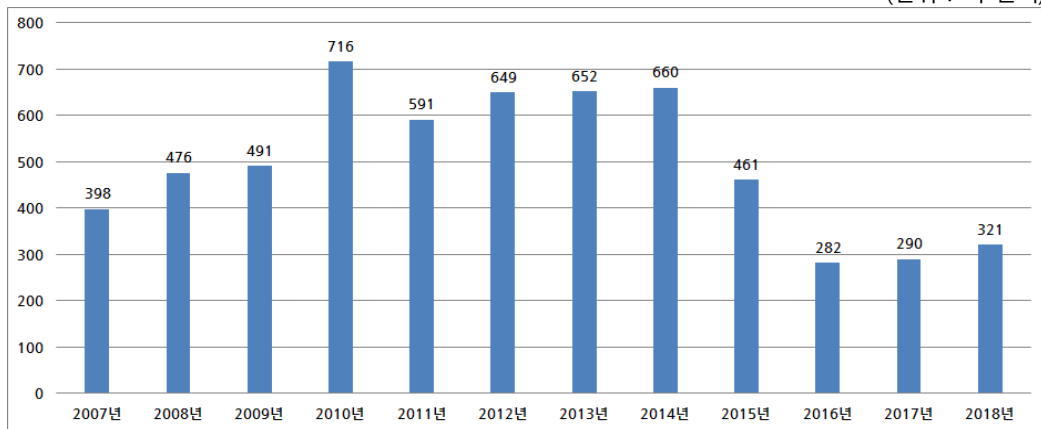
- 300억 달러 회복했지만, 2019년 해외건설시장 불확실성 높아 -

■ 2018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321억 달러 기록

- 2018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1억 달러 증가하며 연간 수주 3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함.
 - 연간 수주 300억 달러는 지난 2007년(398억 달러)보다도 100억 달러가량 낮은 규모로 수주 회복 탄력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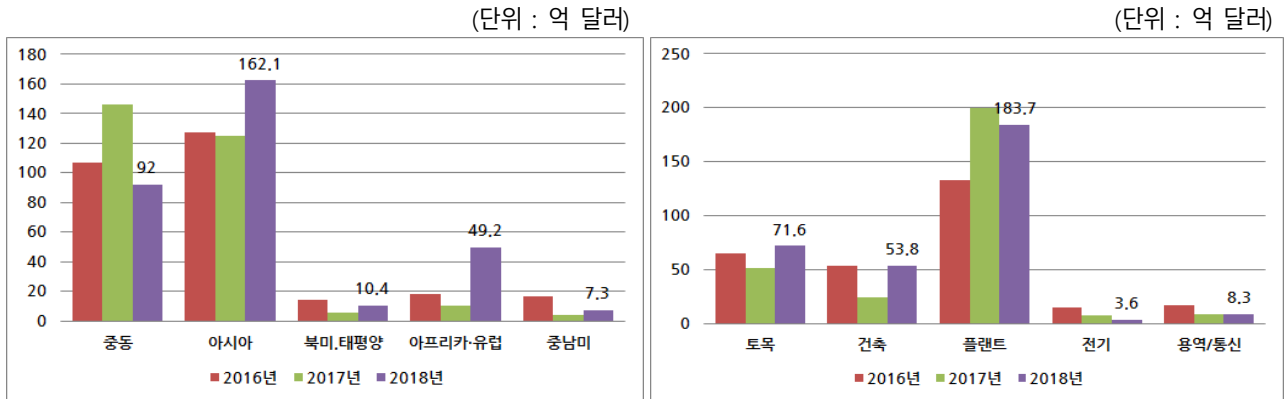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2018년 12월 31일 기준).

■ 아시아 지역과 플랜트부문이 각각 전체 수주액의 50.5%와 57.2% 차지

- 2016년과 2017년 120억 달러 수준이었던 아시아 지역의 수주는 전년 대비 29.7% 증가한 16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 수주를 견인함.
 - 반면에 중동 지역은 92억 달러(전체 수주의 28.7%)로 전년 대비 36.9% 하락하며 2006년(95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하회함.
 - 이에 비해 북미·태평양(10억 4,000만 달러)과 아프리카·유럽(49억 2,000만 달러), 중남미(7억 3,000만 달러) 지역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 공종별로는 플랜트 수주액이 183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반면에, 건축과 토목은 각각 29억 8,000만 달러와 20억 2,000만 달러 증가함.
 - 전년 대비 전체 수주에서 토목과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3%와 16.8%로 증가했지만,

해당 공종의 수주 규모는 매년 변화가 커 비중 확대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그림 2> 최근 3년간 지역 및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자료 :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2018년 12월 31일 기준).

■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폭락 재현 여부가 2019년 해외건설 수주의 최대 변수

-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신용 불안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와 국제유가 급락은 2019년 해외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8년 국제 유가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첫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WTI와 Brent유 모두 약 25%와 20% 하락함. OPEC 등 산유국의 감산 조치와 이란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점은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임.
 - 중동 산유국의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2019년 발주 예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주 전략이 필요함. 동시에 지난해 수주 비중이 증가한 아시아, 유럽 등에서 수주 지속성 확보가 요구됨.

<그림 3> 2018년 브렌트유 가격 동향



자료 :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2018년 12월 31일 기준).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남북 교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 독일 사례를 통한 남북 부동산시장 예측, 관건은 민간으로의 이행 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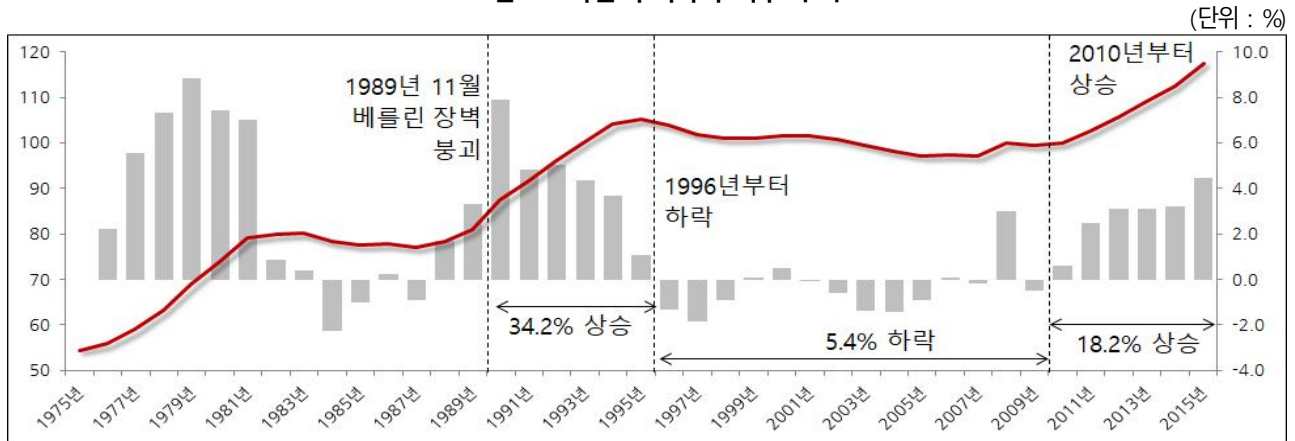
■ 공공 중심에서 민간으로 이행 속도에 따라 부동산산업의 기회 다를 듯4)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시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의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 작년 1~11월 접경지역의 토지가격은 파주시(9.20%), 고성군(7.59%), 철원군(6.32%), 연천군(5.85%)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동 기간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에서는 토지 거래량 및 관할 시도 외 매입자 증가가 확인됨.
-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수요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확인코자 함.
- 통일 이후 20년간(1990~2008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순이주 규모는 138만명으로, 이는 1990년 동독 인구의 8.6%에 달함. 인구 이동 패턴은 동독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통일 직후 2년간(1990~1991년)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량 이주가 이루어졌으나, 통독 정부의 집중적 경제 지원에 대한 기대로 1992~1997년에는 서독 이주는 둔화되고 서독에서 동독 이주가 활발함.
 - 1998년 이후 통일 특수 종료 등으로 독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동·서독 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될 가능성 증대되면서 다시 동독에서 서독 이주가 활발해짐.
 - 동독의 젊고 교육받은 계층의 서독 이주가 가장 많았음.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 중 30세 미만 비중이 67%에 달함. 이는 동독 지역 노동력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킴.
- 통일 이후 독일 주택가격은 단기 상승 이후 14년간 장기 하락세를 나타냄.
 - 통일 전후(1989~1995년)로 독일 주택가격은 34.2% 상승하였으나, 전 세계 주택가격 급등기인 14년간(1996~2009년) 5.4% 하락함. 금융위기 이후(2010~2015년)에는 18.2% 상승함.
 - 독일 주택가격의 장기적인 안정 원인으로는 통일 후 공급 과잉, 보수적 모기지 시장 구조, 높은 거래 비용,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따른 낮은 자가 점유율 등이 지목됨.
 - 금융위기 이후에는 뮌헨 등 서독 지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회복됨.

4) 서울부동산포럼 15주년 창립기념 세미나(2018. 12. 4)의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한 부동산시장의 시사점 :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자료의 일부를 요약·정리함.

- 상품별로는 통일 이후 상업용 가격이 선행하여 상승하고 주거용은 후행하는 양상을 보임.
 - 통일 효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먼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3년 이후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다만, 하락 시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중·소형 오피스의 수익률 변동성이 가장 컸으나, 프라임 오피스는 통일 영향이 극히 미미했음.
 - 통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세가 확인됨.

<그림 1> 독일 주택가격 지수 추이



주 : 연간 기준의 모든 주거용 지수.
 자료 : BIS.

- 동독 지역은 짧은 공급 호황 이후 대규모 공실과 장기 침체를 겪음. 호황기 동안 이루어진 단기간 대규모 공급, 신규 중심의 공급 방식, 외곽 입지 등이 모두 침체에 영향을 미침.
 - 동독 지역은 1993~1996년까지 정부의 대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공여를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 그러나, 1997년 이후 가격 하락·물량 급락을 동시에 경험함.
 - 인구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여 동독 지역의 공가율이 급증함(1993년 6.2%, 1995년 8.6%, 1998년 13.2%, 2005년 20% 상회).
 - 복잡한 소유권으로 인해 유지 보수보다는 신규 공급이 오히려 저렴하였고 '새로운 도시 건설'이라는 정치적 선호도 함께 존재하여 기존 주택의 정비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이 다수 이루어짐.
 - 도심보다는 열위의 입지인 외곽 지역에 주로 공급되어 공가율 상승을 더욱 심화시킴.
-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기회는 민간으로의 이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경쟁 수준, 북한의 경제 및 지불 능력, 생산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산업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공공 주도 협력에서 주거용·상업용 등 민간 시장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동독 지역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경제 성장, 수요 관리, 공급 속도 조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our@cerik.re.kr)

미국 건설기업의 인재 양성 이슈와 시사점

-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업의 다양한 전략 구사 필요 -

■ 미국의 건설기업은 각종 변화에 대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상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큼.⁵⁾

- 현재 미국의 건설기업들은 “인재 부족 현상(응답자의 89%가 답변)을 겪고 있는 데 비하여 기업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자평함.
 - 즉, 인재 부족 현상과 채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응답자의 43%가 자신의 회사에서는 인사관리 차원의 투자 이외에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공식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 전략에 있어서도 최우선 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답변함.
 - 참고로 조사 대상 기업이 직원 그룹당 투입하고 있는 연간 훈련비용을 살펴보면 임원급은 약 9,000달러, 프로젝트 관리자는 약 7,200달러, 기능공은 약 7,100달러, 현장 관리자는 약 7,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규모 클수록 인력 양성 문화는 우수하나 성과 및 경력 관리에서는 미흡한 측면도 많아

-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회사 자체의 풍부한 전문가 양성 문화와 성과 및 경력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나, 성과 및 경력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력 양성 체계는 크게 ① 피드백, ②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 ③ 개인 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5%는 기업 내의 전도유망한 젊은 인재를 리더 그룹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는 아직 취약한 것으로 답변함.

■ 향후 5년 이내에 미국 건설기업에서 인력의 자연 감소가 가장 높은 분야는 ① 현장 관리자(20%), ② 경영진(19%), ③ 상급 관리자(16%) 순으로 조사됨.

5) 미 FMI사는 2017년 미국의 대형 E&C 회사에 근무하는 245명으로부터 인재 양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Talent Develop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7 FMI Industry Survey.

- 응답자들은 현재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영역을 평가하고, 이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함.
 - 즉,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통적인 기술자뿐만 아니라 유능한 젊은 층이 포진된 IT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의 확보가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조사 대상인 미국 건설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요 전략은 ① 적절한 업무 배치, ② 경쟁력 있는 급여, ③ 교육 및 훈련의 기회, ④ 지속적인 경력관리 체계의 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공식/비공식 멘토링과 개인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경력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퇴직자를 위한 각종 사업과 순환 근무 기회 역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국내에서도 건설사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한 인재 확보 전략 필요

- 미국 건설기업은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건설시장의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어 인재의 양적·질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현장 관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히 이 분야에 대한 은퇴자의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설사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연계한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기업 본사 및 현장의 관리와 생산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와 유지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미국 건설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지출이 현장 관리자와 유사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국내의 경우도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기능인력의 직접 고용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기업의 현장관리 역량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되는 만큼 핵심적인 기능인력의 직접 고용과 이들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각종 투자는 건설기업의 현장 장악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2018년은 남북 화해 무드 속에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 한 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고용 부진, 투자 둔화, 그리고 소비 감소 등 좋지 않은 경 고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 쇼크라 할 정도로 고용시장 위기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체 활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도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이다.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건설 수주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의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민간 주택 수주는 2018년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또한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라 공공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건설투자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2017년 3분기 부터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2018년 2분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3분기에는 19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더욱 암울한 것은 최근의 건설 수주와 투자 동향을 볼 때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한결같이 2019년 국내의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투자의 감소세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전후방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위축은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할 때다. 국회의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19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위해 8조 6,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에서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보다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7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부진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 아래 보다 세심한 실행 중심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급속히 위축되는 민간 주택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주택 투자가 급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하며,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 중소 건설업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

2019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 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든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주경제, 2018.12.19>